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억압”

악대본, 성명 통해 “법사위 통과 안 돼” 촉구
‘중요심’ ‘혐오’ 표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동성애 등 비판 금지될 수 있고 설교 규제 가능성도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가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악대본은 성명에서 “지난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4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시민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과방위에서 졸속 심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악대본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허위정보

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

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중요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추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악대본은 이 조항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등’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고 간주될 경우 동성애 비판이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요심’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젠더)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 의견을 SNS,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까지 금지될 수 있

고,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악대본은 “방송 심의규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개정된 것은 LGBT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조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로 바꾸며 ‘혐오’라는 표현을 삽입한 데 대해 “혐오는 모호한 개념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악대본은 대한변협 인권보도대회에서 양홍석 변호사가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은 국제적 합의도 부족하고 모호해 규제 논의 자체가 위험하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

며, “윤라도덕을 지키려는 건전한 활동까지 방송에서 금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악대본은 성명서 말미에서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의 모든 표현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강력한 규제로 민주 사회의 근간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반대비판 의견을 인터넷과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까지 금지되고, 위반 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성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 묵상… 남은 사명·신앙의 길 되새겨

은퇴(원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 개최…
‘영접의 믿음과 빛의 사명’ 강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선, 이하 한장총)가 1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5 은퇴(원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를 개최했다.

예배는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본부목자교회가 주관했으며, 은퇴 및 원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의 본질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장정국 목사(원로목사회 상임회장)의 찬양인도와 이강욱 장로(한장총 섬김위원장)의 예배인도로 진행된 성탄예배는 조세영 목사(한장총 총무)의 기도, 표성철 목사(한장총 서기)의 성경봉독, 이선 목사의 설교, 임신헌 목사의 합심기도, 이석현 전 국회의원(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의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이선 목사가 ‘밝게 비추는 빛이 오셨습니다(요 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성탄의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수 없는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으며, 그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 주님을 모실 때 비로소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탄절을 맞아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세



한장총 2025 은퇴(원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탄예배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목사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이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며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목회자와 장로라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본문 말씀을 인용해 “영접하는 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생명줄을 붙잡는 것과 같으며,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함께하신다. 날마다 빛이요 생명인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권면했다.

설교 후에는 임신헌 목사가 축복기도와 함께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임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 시간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이어 주여 삼창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후 이석현 전 국회의원(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과 미움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주의를 넘어 서로 돕고 화합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전하며, 특별히 노년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한편, 예배는 임병철 목사(원로목사회 사무총장)의 광고에 이어 허호성 목사(한장총 공동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장지동 기자

태여연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불법”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

태여연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태여연)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태약 도입 추진 움직임과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태여연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고,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형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입장이 “형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불법”이라며, 정부와 식약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대한산부인과사회가 2021년 11월 발표한 입장문도 언급됐다. 당시 산부인과사회는



태여연 기자회견이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태여연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 약에 해당한다”며, 법명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할 경우 의료진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으며, 의학작윤리적 문제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 낙태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물 낙태 후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언자로 나선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최근 의협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일 “임신 10주 이후에야 태아 기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임신 10주 이후 낙태를 처벌하는 법안은 의학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사는 태아 기형은 과거와 현재 모두 낙태의 일반적 사유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형은 출생 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진이 산부인과 의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최근 입장이 과거 산부인과 관련 학회와 의협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태의 상당수가 임신 10주 기준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여연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의협의 최근 입장이 장애와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낙태 관련 제도 논의에서 형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낙태약 허가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분열 갈등의 시대
나라 비추는 등불 되길” >> 7면

하이패밀리, 연말연시
‘성경 나눔 마라톤’ 개최 >> 23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